

“섬세함이 활짝 피는 한해가 되기를”

전북교육청 시무식 갖고 희망찬 기해년 출발 알리

전북교육청은 3일 2019년 시무식을 갖고, 희망찬 한해의 출발을 알렸다. 돼지띠 직원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무식은 김승환 교육감, 정병익 부교육감, 국·과장 등 간부진을 비롯해 도교육청 전 직원들이 함께했다. 시무식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김수영 시인의 ‘풀’을 소개하며 일 하는데 있어서의 섬세함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풀’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시인이 참으로 섬세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풀을 그냥 지나칠 때 시인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며 “전북교육청 직원들도 일 하는데 있어서 섬세함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내 손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라도 스스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는 전북교육청 직원들의 섬세함이 활짝 피는 한해가



전북교육청은 3일 2019년 시무식을 갖고, 희망찬 한해의 출발을 알렸다.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무식은 직원들의 새해 소망 영상 메시지 상영, 전북 아카펠라 음악교육연구회의 문화공연, 행운권 추첨, 간부공무원과 직원간 하이퍼

이브 인사 등 색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소통 강화를 위한 ‘행운권 추첨’이 눈길을 끌었다. 개인별로 추첨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교육국 1팀과 행정국 1팀씩 짝을

이루 추첨, 북카페 이용권을 제공했다. 서로 다른 두 팀이 만나 교류·소통하면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보자는 취지다.

/장은성 기자

교육부, 교육신뢰회복 추진팀 등 3개 팀 신설

교육부가 올 한 해 교육신뢰회복추진팀과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학부모정책지원팀 세 조직을 신설했다.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언급하며, “교육비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신뢰회복 추진팀은 감사관실 소속이다. 기존 감사관실 산하 감사총괄담당관과 반부패청렴담당관, 사학

감사담당관은 정기감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특정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 인력이 부족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나 서울과기대 자녀 학점 몰아주기과 같이 제보를 통해 사안감사나 특정감사가 필요한 상황이 빈발했다. 교육신뢰회복 추진팀은 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터질 경우 발빠르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정책협력관 산하 온종일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은 온종일돌봄체계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태스크포스다. 지난해 11월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됐고, 23일 온종일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령)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타부처는 물론 지자체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별도 조직이 신설될 것이다. 훈령이 확정되는 대로 현장지원단에는 관계부

처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인력들이 추가 과결될 예정이다. 학부모정책지원팀은 교육부의 신년 업무보고한 학부모정책 전담조직이다. 특히 정책 주요 고객인 학부모와 소통·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유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혁신지원실 산하 조직으로서 향후 초·중·고교에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여론 수렴과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뉴시스

방송통신중학교신입생 모집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201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등 학력 소지자, 또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다. 만 16세 이상, 무시험전형이며 지역 제한 없이 연장자순으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4일~25일까지 (토·일 제외)며, 입학원서와 여권용 사진,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접수하면 된다. 입학 후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출석 수업은 매주 토요일에 실시 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라중교 무실 (063-252-2759)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초등 수학·사회·과학 교과서 2022년 검정으로 전환

2022년부터 초등학교 수학·사회·과학 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각 출판사에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개발할 시간을 주고, 2021년 심사를 거쳐 2022년 현장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후 5~6학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어 교과서는 초등학교 핵심교과목인 만큼 2023년 이후 수학·사회·과학 검정교과서 성과를 검토한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제작해 저작권

을 갖는 형태로,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와 예체능계열 교과서를 제외하면 모두 국정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검정교과서는 저작권은 출판사와 집필진에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한다. 단일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으로 전환될 경우 각 출판사 경쟁을 통해 채택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과서 질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자유발행제도 올해 고등학교 일부 직업계열 교과서에 도입된다. 보다 직업동향과 최신 기술을 담아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유발행제는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형식이다. 인정도서는 교과기준과 공통기준을 준수하며 9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자유발행 시 공통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며 심사기간도 3~4개월로 단축된다. 자유발행제는 입학·행정예고를 거쳐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1학년도에는 특성학교 학생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신 교과서 질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교과서 품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자녀와 추억 쌓을 수 있는 길 열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일 입법예고

오는 2020년 3월부터 맞벌이 학부모도 자녀의 체육대회나 학예회 등에 참석해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학교의 주5일 수업제를 의무화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진행되는 교육활동과 행사를 수업일로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에 안착하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일부 대안 학교나 기숙학교 등 월 2회만 토요일을 제외하면 모두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9개 학교도 향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초·중·고를 비롯해 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

하는 경우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들이 주말에 학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체험학습이나 학예회 등 다른 교육 목적의 활동도 마찬가지다.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토요일과 공휴일 중 교내외 행사를 열고, 이를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교사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방학을 하루 더 당기거나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충받을 수 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규정에 따라 대체휴무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20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저소득 어르신에게 사회활동 기회 부여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 제공

올해 노인일자리가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시설 등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난 61만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3월까지 시작했던 노인일자리 사업 시기를 이달 중순으로 앞당기고 일자리도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시설 식사보조, 방과후학교 안전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를 포함해 노노케어·보육시설 봉사·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23개 일자리 44만1000개, 시장형사업단 6만개, 재능나눔 4만 7000개, 인력파견 2만6000개, 시니어인턴십 9000개, 교령자친화기업 2000개 등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올해 61만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한 해 80만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미 참여자보다 의료비 지출은 85만원 적고 우울수준은 낮아, 비용보다 편익이 1.6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시작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된 공익활동 신청자가 부족할 땐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가능할 수 있다. 또 수당이나 임금 시기를 공익활동이나 일을 한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하던 종전과 달리,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토록 했다.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참여자 모집기간이 이달 10일 이전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희망자는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해 연초 더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혼란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